

道,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눈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구직활동 지원으로 사회진입 도와 월 최대 10만원 2년 만기 최대 500만원 받는 '두배적금'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청년정책이 눈길을 끈다.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청년정책 꾸러미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지역정책 지원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는 직업 탐색기(미취업→구직)에는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사회진입기(구직→재직)에는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안정기(재직→정착)에는 체계적인 자산형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종합정책이다.

민선8기 김관영 지사 공약으로 시행 중인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부터 재직 청년의 지역정책과 자산형성까지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내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만족도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도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로 연계한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탐색과 취·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수당을 지급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1회에 한해 성공

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재 및 도서구입, 자격증 접수, 면접준비 비용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 도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4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2,000명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청년 지역정책 지원사업'은 정착기반이 약한 취업초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한다.

농·어·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 지역 주력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5,000명이 넘게 접수, 지역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지역거주기간 등을 심사하고 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을 조화한 뒤 3월말 최종 3,000명 선정, 수당을 지원한다.

수당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문화 등 사용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대상을 확대해 왔다.

'전북청년 합성 패키지'는 도내 근로 청년이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 지원액 10만원을 적립, 2년 만기시 최대 500만원(원금 480만원+이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희망까지 두배로 돌려주는 매칭 저축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인 18~39세 근로 청년이며,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300명 모집에 7,000명이 접수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3~4월에 대상자 모집 예정이며,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의 역할을 넘어 선정된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기초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례 없는 위기로 과거와는 달랐던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놓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높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지원사업과 더불어 청년월세 지원, 전북 청년마을 조성,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청년의 도약과 지역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전공의·의대생, 집단사직 확산

의료공백 우려 속 동맹휴학도 추진 도, 군부대·보건지소 총동원 대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전북의 수련의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공의에 이어 도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수련의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의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빅5 병원' 전공의 사직 시점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6일 현재 기준). 빅5 병원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기로 했다.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도 대전협 의결 시간에 발 맞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경우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 제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수련의 병원인 원광대병원 전공의들은 전날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북

대병원 187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 등 총 401명이다.

이번 집단사직 사태로 전북의 의료공백 우려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사안이 장기화 될 경우 최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약 1~2주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집단 사직이 이뤄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실과 수술 등 병동"이라며 "남은 의료진들이 1~2주를 버티겠지만 사안이 장기화 될 경우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격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전북대·원광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추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민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집단사직이 진행될 경우 지역의 일부 공공병원과 군자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 환자 및 의료진을 이동배치해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국장은 "개개인이 사직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집단 사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내릴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아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옹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김상근 목사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22대 총선 정책과제 아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경력채용...전년비 24명 ↑

정부가 올해 경력·학위·자격증이 있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5명 선발한다. 채용인원은 작년보다 24명 더 늘었으며 선발 직급은 6급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16일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41명)보다 24명(58.5%) 증가한 65명이다. 최근 5년 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은 2019년 25명→2020년 39명→2021년 33명→2022년 45명→2023년 41명→2024년 65명으로 올해 크게 늘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선발은 지난 2008년 18명을 처음 선발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42명이다. 2022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1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채용한다.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3

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6급은 재외동포청 행정직으로, 7급은 통계청과 특허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정직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전산직·농업연구직 각 4명, 해양수산·기타 각 2명을 뽑는다.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계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에서도 새롭게 19명을 처음 채용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등 중증장애인이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올해부터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는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4월 서류전형, 6월20~21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기자협회·언론진흥재단 '총선 여론조사 깊이 읽기'

협회 회원 20여명 대상 연수

전북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는 지난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협회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언론 맞춤형 4·10 총

선 여론조사 깊이 읽기'를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류정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팀장과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제22대 총선 여론조사 보도를 위한

심의제도 활용'과 '깊이 있는 선거기사를 위한 여론조사 분석 전략' 등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여론조사 활용 보도 시 주의사항과 기사작성에 도움을 주는 여론조사 해석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앞으로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와 함께 '전북지역 언론맞춤 4·10 총선 여론조사 깊이 읽기' 연수뿐만 아니라 취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문기자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